

# 미국의 세기: 미국 주도 세계화의 경제적 측면\*

양 동 휴  
(서울대학교 경제학)

## I. 미국과 세계화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세기’,<sup>1)</sup> 즉, 20세기의 ‘미국 주도 세계화’를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측면을 부각시켜 사회, 정치, 문화적 접근과 학제적 종합을 이루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절에는 몇몇 개념 및 용어 사용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위치를 시대순으로 정리한다. 다음 절에서는 미국의 헤게모니 획득과정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미국 주도 세계화의 ‘비대칭적’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제4절은 1980년대 중엽 이후 미국이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입각한 세계화를 포기하고 자국 이익 중심의 지역주의로 선회한 사실을 음미하고 검토한다. 마지막 절에서 미국이 세계화를 계속 주도할 것인지 세계화가 계속 확대·심화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점검한다.

우선 미국이 세계화를 ‘주도’한다는 것은 헤게모니와 리더십을 갖는다는

---

\* 이 논문은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4-044-A00001)

1) ‘미국의 세기’라는 표현은 *Time*, *Life*, *Fortune*지 등의 발행인인 Henry Luce가 1941년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Henry Luce, “The American Century,” *Life* 10, February 17, 1941, pp. 61-5. 당시는 아직 미국이 최강국의 지위에 적응하지 못하여 불안정한 상태로 서, 이 개념은 현실을 반영했다기 보다 희망과 비전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립주의를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전 세계의 진보를 이끌어 갈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Alfred E. Eckes, Jr. and Thomas W. Zeiler, *Globalization and the American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119-120; Harold Evans, *The American Century* (New York: Alfred A. Knopf, 1998), pp. xiii-xxiii 참조.

말로서 세계화의 관리, 가버넌스(governance)에 주된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런 면에서 제국주의나 신식민주의 등 지배와 착취의 뉘앙스가 있는 개념과 대비된다. 즉 무정부 상태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력을 발휘하며,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국제체제를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공공재에는 국제항로, 재산권 보호, 계약이행 강제, 자유무역, 국제결제와 투자를 위한 통화체제, 이민과 투자 및 정보이동을 제한하는 정부규제의 최소화, 등이 포함된다.<sup>2)</sup>

이와 관련하여 헤게몬이 있어야 자유주의적 국제경제가 안정된다는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자주의적(multilateral) 세계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와 단일 권력이 경제를 강력하게 주도한 시기가 역사적으로 일치함을 단순히 관찰한 것(19세기 후반 영국,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출발한 이 가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헤게몬(미국)의 힘이 약해졌을 때 쌍무적 협정이 만발한 사실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한 이론적인 지지도 차츰 축적되어, 강력한 리더쉽이 없을 때 무역, 통화, 기타 분야의 국제협력은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단순한 카르텔 이론에 따르면 회원이 많을 경우 지배적 기업(dominant firm)이 협약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집행할 때만 카르텔이 안정적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접한 두 개 기업의 복점(duopoly)이 가장 유지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다극화 현상이 쌍무적 지역주의를 자극했다는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자유무역을 국제적 공공재로 간주한다면, 그 공공재의 공급을 원하는 강력한 국가의 압력이 없을 경우 다른 나라로서는 일방적으로 무역장벽을 낮출 유인이 없을 것이다. 같은 논리로 헤게몬의 세계경제상 중요성이 줄어들면 보호주의 사상이 부흥하고 해외원조도 줄이게 되며 지역주의가 득세하게 된

2) Patrick K. O'Brien, "The Pax Britannica and American Hegemony: Present, Antecedent or Just Another History?" in P. K. O'Brien and Armand Clesse (eds.), *Two Hegemonies: Britain 1846~1914 and the United States 1941~2001* (Burlington, VT: Ashgate Publishing, 2002), pp. 3-4.

다.3)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기구분에 따라 헤게모니의 식별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19세기 후반을 세계화의 제1차 물결(first wave), 20세기 후반을 세계화의 제2차 물결(second wave)이라 부른다. 이와 같이 헤게모니는 1846~1914 동안에<sup>4)</sup> 영국에, 1941년 이후<sup>5)</sup>에는 미국에 있었던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헤게모니의 시발점은 각 헤게몬이 자유무역을 주도하기 시작한 시간으로 지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6)</sup> 학자에 따라서는 세 번의 헤게모니 기간을 설정하기도 한다. 즉 네덜란드 17세기, 영국 1815~1873, 미국 1945~1967/73이 각각 헤게모니의 정점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헤게모니 국가가 여타의 강력한(취약한 여타국이 아니라) 국가들보다 월등히 더욱 강력했던 기간으로서, 나머지 기간에는 여러 강력한 국가들 간에 ‘세력균형’이 존재했다고 한다. 이러한 설정에 따르면 헤게모니는 구조가 아닌 시간과정으로 파악해야 하며, 헤게모니란 스스로 쇠퇴해갈 수 밖에 없고 영구히 지속할 수 없다.<sup>7)</sup>

어떤 구분에 따르든지 이 글의 대상은 미국이 자기 나라를 더 넓은 세계경제에 통합시키면서 나머지 대부분 지역을 미국의 주도 하에 포용하는 경로이다. 미국은 1890년대부터 외교 활동과 함께 해외무역과 투자를 지

3) Robert Gilpin, *Global Political Economy: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p. 95-97. 자유주의적 국제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지배적 경제권력에 의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최초로 본격적으로 정립한 학자는 킨들버거이다. Charles P. Kindleberger,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그에 의하면 정상시에 헤게몬은 빈국으로의 자본이동을 유지하고 주요 통화간의 환율을 안정시키며 선진국간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기시에는 품귀된 재화를 공급하고 특히 국제금융 위기에는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1930년대에 헤게몬이 부재했기 때문에 국제경제가 심연으로 추락했다는 그의 설명은 아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헤게모니 이론은 후학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고 여러 형태의 확대 해석과 비판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양동휴,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경제발전연구』 10 (2004), p. 23; Gilpin, *Global Political Economy*, pp. 97-102.

4) 곡물법 폐지부터 1차대전 발발까지.

5) 미국의 2차대전 참전.

6) O'Brien, “The Pax Britannica and American Hegemony.”

7) Immanuel Wallerstein, “Three Hegemonies,” in O'Brien and Clesse(eds.), *Two Hegemonies*.

속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차대전 후에는 영국에 필적하는 세계의 지배적 권력으로 성장하였다. 1920년대에 전쟁 전 국제금융 시스템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은행가들은 영국 금융가들을 제치고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자 하였다. 미국의 상품들은 재즈나 할리우드 영화 등 미국문화와 함께 세계 곳곳을 파고들었다. 대공황이 이러한 실험을 중단시켰고 1930년대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이 고립주의, 심지어 아우타르키로 후퇴(backlash)하였다.

2차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사상과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고립주의가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는 확신 하에 1945년 이후 미국은 안정적 통화와 낮은 무역장벽으로 대표되는 개방적 세계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엄청난 양의 자원을 쏟아 부었다. 물론 냉전체제라는 제약 때문에 미국은 서유럽과 일본과의 협력에 기반을 둔 ‘부분적 세계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었으나 미국의 해외투자나 이에 수반된 문화적 침투는 1945년 이후 증가 일로에 있으며 국제 무역의 성장은 전세계의 경제적 팽창을 자극하였다. 냉전의 종식으로 ‘미국의 세기’는 마지막 대전환을 맞았다. 대외경쟁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구소련동구권의 방대한 지역은 미국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때를 맞추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창설을 주도하여 세계화의 수준과 심도를 높이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세계화와 헤게모니의 연결에서는 아마 군사적이고 문화적 측면이 더 중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경제적 의미의 세계화란 “재화 및 용역, 그리고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의 시장이 더욱 밀접하게 국제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sup>8)</sup> 생산기술의 전파라든가 정보의 신속한 전달 등이 부수적으로 뒤따른다. 상품시장과 요소시장의 통합은 교통통신의 발달 등 기술적 근간과 재산권의 안전, 계약의 이행, 안정적 통화 및 재정정책, 무역정책 등 법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촉진된다.

8) Michael Bordo, “Globaliz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Business Economics* (January 2002), p. 20.

그렇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를 ‘주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1차대전 후 재건된 금본위제의 실패와 세계경제의 분할 및 블록화의 경험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2차대전 후 미국은 IMF와 GATT/WTO 등의 ‘도구’를 통해 시장통합을 선도하였다. 점령지역(서독, 일본)의 탈군사화, 탈공업화, 미국식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각종 개혁, 즉 독점금지, 노동조직, 농지개혁 등으로 시작한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은, 냉전의 도래와 함께 사회주의 붕괴를 위한 방향으로 선회하였으며, 브레튼 우즈 체제의 안착(1958) 때까지 서유럽과 동아시아에 특별원조 등 예외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세계화를 ‘주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시기별 내용을 1980년대까지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 미국과 세계경제, 20세기

기능	1901~14	1919~29	1930~39
상품 시장	강한 보호정책 1913 완화	덤핑방지 관세, 1927 관세휴전 무시, Stevenson 고무 계획에 저항	무책임한 Hawley-Smoot 관세, 1934역전 RTAA (상호관세협약법)
외환	금본위 하에서 '자동'결정	뉴욕연준 유럽과 협조에 관심	Thomas 수정안, 금가격변화, 세계경제회의 3국통화 협약 파기
자본 이동	성숙한 채무자 해외직접투자 상환	Dawes 대부, 단기자본수출 1924~8 뉴욕증시 호황으로 중단	채무불이행 만연,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대부 중단
재정금융 정책의 조정	금본위제, Aldrich 위원회, Federal Reserve Act	전시채권상환금유입을 불태화, Ogden Mills 중앙은행회합	영란은행과 미약한 조정시도
최종 대부자	불필요	고립주의, 전시채무에 대해 집착	너무 늦고, 너무 적음, 세계경제회의 태업

기능	1945~70	1971 이후	비고
상품시장	ITO, GATT, Dillon 및 Kennedy 라운드 전략적 재고정리, 통합위원회 비관세장벽	쌍무적 수출제한, 다자간 섬유협정, 콩소비협정, 아랍석유수출국기구 수출금지 산유국에만 잔존	Gephardt 상호보복위협, 양면적 상품협정,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외환	브레튼 우즈, 영국에 특별대부, 마셜윈조, 금 풀 스왑, G-10 SDR	10% 평가절하 및 변동환율, 온건한 방치, Baker 계획, 1982-5를 조정할 Louvre 협약, 달러가치 상승	금 적신호제, Mundell 등, 자유하락? 유동성은 문제가 아님
자본이동	무역수지은행, 세계은행, 지역적 개발은행, 이자평형세, 자발적 신용제한계획, 강제적 통제계획	'1971의 범죄' 이후 국별 은행대부, 대규모 자본유입, 재정증권 부동산 주식	Baker 은행의 지속적 대부 주장, Black Monday
재정금융 정책의 조정	IMF, OECD, 생산향상위원회 #3, 수표결제조정	Carter 계획, 견인차, 정상회담 등 비효과적	미국은 일본에 수출지향적 성장을 자제하라고, 서독에 인플레이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데 실패
최종 대부자	마셜플랜, 스왑, Paris 클럽	Mexico 1982, Basel 협약 1975	책임소재가 불분명

자료: Charles P. Kindleberger,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Economy in the Twentieth Century," in Carl-Ludwig Holtfrerich (ed.), *Interactions in the World Economy: Perspectives from International Economic Histor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9), pp. 290-291.

## II. 미국의 헤게모니 획득 과정

세계화를 '주도'하려면 그 만큼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이 주요 계기가 되어 이후 1947년 경에 시작된 냉전시대에 막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지만 이러한 흐름의 시초는 미서

전쟁(1898)인 것으로 흔히 이야기된다. 이에 이어 미국의 팽창적 대외정책 방향을 천명한 1904년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의 몬로 독트린 확대 해석('Roosevelt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유럽 열강이 미주 대륙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세가 불안하거나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중남미와 카리브 연안 국가들의 내정에 미국이 간섭할 권한이 있다는, 다시 말하여 국제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04년 12월의 선언 이후 1905년에는 외채상환을 불이행한 산토 도밍고에 군함을 파견하여 관세 징수권을 접수함으로써 선언이 단순한 위협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앞절에 언급한 '패권안정론', 곧 헤게몬의 존재가 금융안정과 평화 같은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가설이 예견했음직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루즈벨트 코롤러리의 천명 이후 1년 내에 런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던 중남미 국채의 평균가격이 74퍼센트, 그리고 2년 후에는 91퍼센트 상승하였다.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줄어들어 유럽제국의 개입유인도 작아졌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중남미에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비용도 줄어든 것은 물론이다.<sup>9)</sup>

이와 같은 군사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우위는 1870년대부터 1913년 사이에 형성되었다. 그 원천은 무엇인가. 먼저 정치적 연합의 이득을 생각할 수 있다. 천연자원의 단일통제, 단일한 국내시장과 대량생산의 가능성 등이 전부 여기에 기반을 둔다<sup>10)</sup>. 정치적 연합이

9) Kris J. Mitchener and Marc D. Weidenmier, "Empire, Public Goods, and the Roosevelt Corollary," NBER Working Paper No. 10729 (August 2004).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쇠퇴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아 영국 헤게모니의 기간이었다. 여기서 '패권안정론'을 원용하는 이유는 미국이 '지역적 헤게모니'를 시작으로 대외팽창을 시도하는 단계에서도 그 가설이 적용되는가를 검토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 제국주의'의 '건축가들', 즉 Theodore Roosevelt 대통령과 Henry Cabot Lodge 상원의원, John Hay 국무장관, Alfred T. Mahan 제독, Elihu Root 국무장관 등의 사상과 정책을 분석한 Warren Zimmermann, *First Great Triumph: How Five Americans Made Their Country a World Power*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2) 참조. Roosevelt Corollary에 대하여는 pp. 440-443.

10) Robert J. Gordon, "Two Centuries of Economic Growth: Europe Chasing the American Frontier," NBER Working Paper No. 10662 (August 2004); Gavin Wright, "American Industrial Success, 1879~1940," *American Economic Review* 80 (1990), pp. 651-668; Richard R. Nelson and Gavin Wright,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의의 이점으로는 첫째, 풍부한 토지 및 자연자원과 여기서 유발된 자원집약적 기술진보. 둘째, 새로움. 즉 농업의 경우 광대한 토지가 대규모 단위로 새로 분배되었다는 것, 또 공통언어, 다음으로 이민자들의 야심찬 동기, 노동의 이동성, 그리고 귀족계급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기술. 자본형성과 거대시장 및 기술혁신간의 선순환, 교환가능한 부품(아메리칸 시스템) 도입, 지속적인 개선의 문화. 마지막으로 정책적 측면인데 철도회사에 토지 증여, 1862 홈스테드 법안, 특허제도, 관세 등이 이로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sup>11)</sup> 한 가지를 더 언급한다면 소위 경영혁명인데, 수직 수평 결합된 대기업에서 과학적 관리, 조직혁신, 전문경영을 채택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으로 대량생산 대량분배가 가능하게 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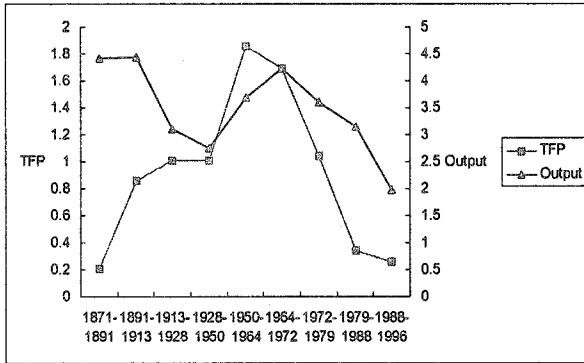
이 시기는 또 '위대한 발명'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1950~73년의 미국 주도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기술혁신의 축적이 뒤늦게 생산성 및 산출증가로 나타난 결과라는 견해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71년 이후의 생산성 추이가 저속-고속-저속 성장하는 초장기 파동('One Big Wave')을 나타내고 있다.<sup>13)</sup> 위대한 발명의 군집은 다음과 같은데 이들은 그 효과면에서 1차 산업혁명이나 최근의 정보통신혁명보다 월등하다고 평가된다. 즉, 2차 산업혁명기의 소위 5개 발명군집은 (1) 전기: 전기모터, 전기조명, 가전제품, (2) 내연기관: 자동차, 항공기, 부수적으로 고속도로, 슈퍼마켓, 교외, (3) 분자재배열: 석유화학, 합성수지, 의약품, (4) 정보, 통신, 오락: 전화, 라디오, 영화, TV, (5) 실내배관과 공공인프라: 상하수도, 오물처리 등인데 이들은 19세기와 20세기 인류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었다.<sup>14)</sup>

---

Technological Leadership: The Postwar Era i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0 (1992), pp. 1931-1964.

- 11) Robert J. Gordon, "Two Centuries of Economic Growth: Europe Chasing the American Frontier," NBER Working Paper No. 10662 (August 2004).
- 12) Alfred D. Jr. Chandler,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idem, "The Enduring Logic of Industrial Success," *Harvard Business Review* 68, 2 (1990), pp. 130-139.
- 13) Robert J. Gordon, "U. S. Economic Growth Since 1870: One Big Wav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9 (1999), pp. 123-128.





주: 중요소생산성은 노동투입에서 연령, 성별, 교육정도의 변화를, 자본투입에서 구조물과 설비의 구성변화를 감안한 구성조성 후에, 순투자에 대응하는 대체시기의 차이를 고려한 자본량조정을 시행하여 구한 결과이다.

자료: Gordon, "U. S. Economic Growth Since 1870: One Big Wave?", p. 124, Table 1에서 작성.

<그림 1> 미국의 비농업 비주택 민간기업 부문의 산출과 중요소 생산성 증가율, 1871~1996 (연율, %).

고든<sup>15)</sup>은 기술혁신의 군집이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는 데 긴 시차가 있음을 설명하는 요인을 부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는 이민이 매우 중요했고 노동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임금을 압박하였으며 노동절약적 설비의 도입을 지연시켰다. 1940년대에는 실질 임금의 수렴, 즉 불평등의 감소가 관찰되는데 미숙련 노동 수요가 높은 기술이 동시에 도입된다면 미숙련 임금의 상승은 효율향상을 자극하여 생산성을 높였을 수 있다. 또한 1922년과 1930년의 고율관세(Fordney-McCumber Tariffs와 Smoot-Hawley Act)가 국제무역을 감소시켜 생산성 상승을 지연시켰다. 마지막으로 자본구성에서 설비-구조물 비율이 1945년경에 급속히 높아진 것에 주목하자. 전동기 혁명에 의해 공장설계

14) Robert J. Gordon, "Interpreting the 'One Big Wave' in U. S. Long-term Productivity Growth," in Bart van Ark, Simon Kuipers, and Gerard Kuper(eds.), *Productivity, Technology, and Economic Growth* (Boston: Kluwer Publishers, 2000), pp. 19-65.

15) *Ibid.*

가 공간절약형으로(예를 들어 group drive에서 unit drive로) 바뀌고 공장의 지리적 밀집현상도 정점을 지나 분산경향으로 발전하였다. 공장설계와 공장입지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총요소생산성 상승이 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소나 기술 이외에 제도와 정책이 또한 불가결하였다. 전후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IMF/GATT 주재 하에 각종 다자간 협상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헤게모니 발휘의 도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튼 우즈 체제, 즉 금태환과 연동된 달러본위의 고정환율제를 통해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도모한 금-달러기축통화 체제였다. 화폐로서 달러는 스텔링이 발휘했던 역할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스텔링이 국제화폐로 사용되는 지역에서 이를 통한 영국 헤게모니의 발현은 거의 없었다. 영국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신용공여나 차관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그 성격이나 조건도 상업적이었다. 반면 브레튼 우즈 체제는 미국 정부의 주도 하에 미국의 직접적인 헤게모니가 발휘되는 현실적인 기제였다. 전후복구와 경제유지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자본수요가 있었으며 이는 달러에 의해 공급되었다. 전후 10년 이상 미국은 이를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sup>16)</sup>

그러나 국제경제질서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구현을 의도적인 착취나 지배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태환재개는 1958년까지 기다려야 했으며 미국은 냉전초기부터 경제적, 군사적으로 엄청난 액수의 원조를 서유럽과 동아시아에 쏟아 부었다. 마셜플랜만 하더라도 서유럽의 경우 독자적인 국제지불장치, 즉 유럽지불동맹(EPU)을 결성토록 함으로써 유럽국가간 다자간 결제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들의 청산지불책임은 국제결제은행(BIS)에만 있었고, IMF 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sup>17)</sup> GATT의 경우에도 서유럽을 염두에 두고 최혜국(MFN) 원리의 예외조항으로 제24조를

16) O'Brien, "The Pax Britannica and American Hegemony", pp. 37-44.

17) 양동휴, 「마셜플랜의 경제적 성과와 의의: 서독의 재건과 유럽통합의 추진」, 『경제사학』 37 (2004), pp. 214-219.

설치, 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이 출범초기부터 브레튼 우즈 체제, IMF/GATT 기제는 엄정할 수 없었다.

서유럽과 일본의 고도성장에 따른 국제수지적자 누적, 월남전과 인플레이션 등 여러 요인이 결국 초래한 달러의 태환정지와 평가절하(1971) 이후 달러의 국제화폐로서의 공식적 지위는 상실되었다. 물론 이와 함께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영향력이 유지되었는데 이것은 달러를 당장 대체할 만한 국제화폐가 없고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제적인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경제와 재정기반에서 미국에 버금갈 국가가 아직 없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재정적자를 누적시키면서도 달러의 위치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일군의 학자들은 '다시 태어난, 부활한(reborn, revived)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명명하여, 지금의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가 40년 전의 체제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평가된 환율을 고수하며 수출주도형 성장에 여념이 없는 '주변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의해 발행되고 미국달러로 표시된 국제준비금을 대량으로 축적하는 한 '중심부' 미국은 지속적으로 소득 이상의 지출수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1960년대에는 유럽과 일본이 주변부 역할을 했고 저개발국들은 아직 국제경제체계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었다. 현재는 세계화의 확산으로 새로운 주변부가 계속 팽창하면서 달러자산 보유를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누적시킬 수 있다. 국제수지조정의 필요가 없으니까 달러가치가 더 이상 하락할 필요도 없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경쟁력을 위해, 또한 보유 달러자산의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재정증권 등 달러표시자산을 계속 구입할 것이므로 당분간은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sup>18)</sup> <표 2>는 2000~2004년 동아시아

18) Michael P. Dooley, David Folkerts-Landau and Peter Garber, "An Essay on the Revived Bretton Woods System," NBER Working Paper No. 9971 (September 2003). Hudson은 이와 같은 현상이 영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비꼬면서 이를 냉소적으로 '재정증권본위제도'(TB Standard)라고 불렀다. Michael Hudson, *Super Imperialism: The Origin and Fundamentals of U. S. World Dominance*, 2nd ed., (London: Pluto

&lt;표 2&gt; 동아시아 주요국의 경상수지와 외환 보유고(10억 달러)

	2000	2001	2002	2003	계(%)	2004년 말 외환보유고(%)
중국	20.5	17.4	35.4	45.9	119.2 (16.2)	395.7 (25.4)
홍콩	7.1	9.9	12.6	16.7	46.4 (6.3)	79.5 (5.1)
인도네시아	8.0	6.9	8.1	7.5	30.6 (4.2)	22.5 (1.4)
일본	119.7	87.8	112.4	136.2	456.1 (62.1)	537.0 (34.4)
한국	12.3	8.0	5.4	12.3	38.0 (5.2)	128.1 (8.2)
말레이시아	8.5	7.3	7.2	13.4	36.3 (5.0)	42.7 (2.7)
필리핀	6.3	1.3	4.4	3.3	15.3 (2.1)	8.3 (0.5)
싱가포르	13.2	16.1	18.9	28.2	76.4 (10.4)	72.3 (4.6)
대만	8.9	18.2	25.6	29.3	82.0 (11.2)	241.7 (15.5)
태국	9.3	6.2	7.0	8.0	30.5 (4.2)	31.3 (2.0)
합계	178.1	145.0	180.9	230.7	734.6 (100)	1,559.1 (100)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주요국의 경상수지와 달러보유 현황이다.

아이켄그린<sup>19)</sup>은 이 가설이 지난 40년 동안 세계경제가 극적으로 변화하였음을 과소평가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1960년대에 비해 '주변부' 국가들의 수가 훨씬 많고 이질적이다. 아시아 제국은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다르고 따라서 정책 우선순위도 다양각색이며 지역적 협력도 제도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상유지를 위해 단결된 움직임을 지속할 가능성이 낮다. 둘째, 달러를 대체할 국제화폐로서의 대안으로 유로화가 존재한다. 셋째, 달러의 태환성이 결여되어 미국 외의 중앙은행들의 정책일관성 유지가 그만큼 불안정하다. 넷째, 자본통제가 제거된 상황에서 민간 금융거래를 규제하기 곤란하며 현상유지를 위한 불태화나 외환시장 개입 등의 비용이 커졌다.<sup>20)</sup> 다섯째, 국내금융시장의 자유화로 인하여 환

Press, 2003).

19) Barry Eichengreen, "Global Imbalances and the Lessons of Bretton Woods," NBER Working Paper No. 10497 (May 2004).

20) 국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외화자산 유입을 '불태화'(sterilize)해야 하는데, 즉 통화량 증

율을 낮게 유지하고 저축을 증대하는 정책이 교역재 부문에 부가적 투자를 집중시킨다는 보장이 없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정책결정자들이 이미 여러 문제를 야기했던 자국화폐의 체계적 저평가 정책을 무작정 반복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브레튼 우즈 체제와 비슷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래 지속되리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sup>21)</sup>

### III. 미국 주도 세계화의 비대칭적 결과

미국주도 세계화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제에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세계화 때문인지 미국의 헤게모니 때문인지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이것은 불가능할 터인데 20세기의 세계화가 이전의 것들과 성격이 다르고 그 특징이 전부 미국주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헤게모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부터 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의 장점 및 바람직한 성과는 상품과 생산

---

가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각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 재정증권과 국내 채권의 이자율 차이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외화보유액 때 100억 달러마다 매년 2억 5천만 달러를 손해본다고 추정되었다.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5). 이차차액의 손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채권매각의 누적은 이미 취약한 금융부문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를 우려한 법적, 제도적 제한에 봉착할 것이다. Economist.com, "You need us and we need you," *The Economist Global Agenda* (April 6, 2005). <[http://economist.com/agenda/PrinterFriendly.cfm?Story\\_ID=3834261](http://economist.com/agenda/PrinterFriendly.cfm?Story_ID=3834261)>

21)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및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20% 정도의 달러가치 하락이 필요하며 overshoot를 감안하면 40% 정도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었다. Maurice Obstfeld and Kenneth Rogoff, "The Unsustainable U. S. Current Account Position Revised," NBER Working Paper No. 10869 (October 2004). 또한 지난 5년간 유로화가 달러에 대해 거의 50% 가치상승을 보였으나 미국-EU 간 국제수지 조정은 별 성과가 없었음을 감안할 때 미국 수입의 가격탄력성이 낮을 것이 우려된다. 미국이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기대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일본 엔화는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leverage가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기술과 정보의 빠른 확산 등에 힘입어 세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의사결정에서의 비민주주의, 지역공동체의 무력화, 생태 및 환경의 파괴,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의 침식, 인권보장의 경시, 직업, 생계, 고용의 불안, 식량부족, 불평등 및 비형평성, 예측불가능한 위협에의 노출 등<sup>22)</sup>을 살피는 일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경제적 측면만 보아도 그 결과가 '중심부'와 '주변부'에 비대칭적임을 나타내는 부문이 여럿 보인다.<sup>23)</sup>

우선 상품시장 통합이란 자유무역을 의미하고 자유무역은 요소부존에 따른 특화를 의미한다. 시장통합이 개시될 때 공업화 수준이 낮고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저개발국의 경우 자유무역은 공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뚜렷하게 나타나며 추세가 역전되는 것은 20세기 후반

- 
- 22) 이것이 세계화 국제포럼(IFG)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10가지 핵심원칙과 대응된다.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Alternatives to Economic Globalization: A Better World Is Possible*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2002), 이주명 옮김,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세계화, 비판을 넘어서 대안으로』 (필맥, 2003). ch. 2. 참고로 세계은행의 세계화 과제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협상에 “개발 라운드”를 개시하여 저개발국 수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춘다. (2) 저개발국의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3) 건강과 교육 서비스의 공급을 늘린다. (4) 개방경제의 역동적 노동시장에 알맞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5) 더 많은 해외원조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6) 외채를 탕감한다. (7)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방안을 강구한다. World Bank, *Globalization, Growth, and Poverty: Building an Inclusive World Economy* (Washington D. C.: The World Bank, 2002), pp. 18-22.
- 23) 경제적 측면을 주로, 또는 비중있게 다룬 저작들 중 강한 친 세계화론으로 Thomas L. Friedman,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Understanding Globalization* (New York: Anchor Books, 2000); *The World Is Flat*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 2005)., 비교적 균형잡힌 세계화의 시각으로 Jagdish Bhagwati, *In Defense of Glob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Martin Wolf, *Why Globalization Work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비판적인 견해로 Joseph Stiglitz,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W. W. Norton, 2002); Hans-Peter Martin and Harald Schumann, *Die Globalisierungsfalle* (Reinbeck bei Hamburg: Rowohlt Verlag, 1996), 강수돌 옮김, 『세계화의 덫: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 (영림카디널, 1997) 등이 눈에 띈다. 또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주로 다룬 Ann Harrison (ed.), *Globalization and Pover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rthcoming) 참조.

의 일이다. 세계화의 제2차 물결에서는 중간재 교역이 급증하여 아웃소싱 등 소위 '수직적 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급속한 공업화가 추세 전환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표 3> 제3세계와 선진국의 공업화 수준, 1750~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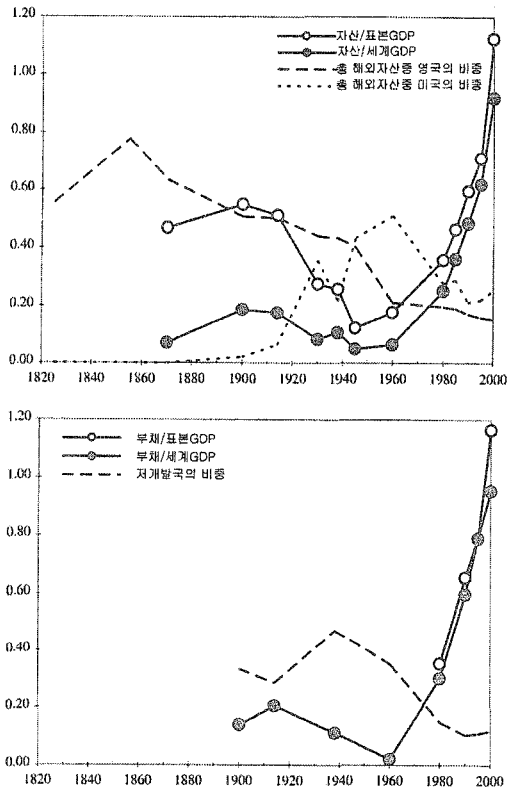
	총 제조업 생산(10억 \$)		1인당(지수 영국 1900년=100)		선진국/ 제3세계
	제3세계	선진국	제3세계	선진국	
1750	93	34	7	8	1
1800	99	47	6	8	1
1830	112	73	6	11	2
1860	83	143	4	16	4
1890	60	481	2	35	18
1913	70	863	2	55	28
1928	98	1,260	3	71	24
1938	122	1,560	4	81	20
1953	200	2,870	5	135	27
1973	927	8,430	14	315	23
1980	1,320	9,910	19	347	18
1990	2,480	12,090	29	412	14

주: 공업화 수준은 1인당 제조업 생산 지수

자료: Paul Bairoch, *Economics and World History: Myths and Paradox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 91.

자본 이동의 경우 19세기에는 국제자본이 주로 주식이나 채권 등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사회간접자본(SOC) 또는 정부부문으로 흘러 들어갔다. 20세기에는 직접투자(FDI)의 비중이 커졌으며 또한 서비스에 대한 직접투자가 늘어났다. 1914년에 미국 해외직접투자의 40% 이상이 광업과 석

24) 양동휴,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p. 6. 아웃소싱은 이민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통합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최근 노동이동의 추세에서 저개발국 전문직 및 숙련공의 선진공업국으로의 이민이 두드러지는 현상(brain drain)은 세계화의 비대칭적 결과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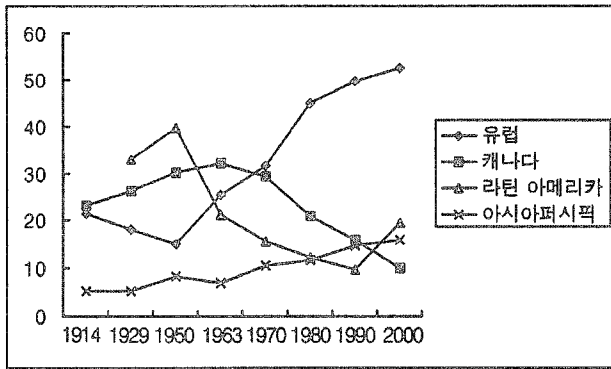
자료: Maurice Obstfeld and Alan M. Taylor, *Global Capital Markets: Integration, Crisis, and Grow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54.

### <그림 2> 해외 자본 스톡.

유 부문이고 제조업과 서비스(주로 철도와 전기, 가스, 수도 등)가 각각 20% 였는데, 오늘날에는 투자대상의 50% 이상이 은행, 금융, 보험, 유통, 에너지, 정보통신 등 서비스 부문이고 제조업은 35% 정도이다. 직접투자는 기술이전을 수반하므로 소득수준 수렴에 일조를 했을 것이다. 이것은 19세기 말 자본이동이 신대륙으로 노동이동과 같이 감으로써 수렴이 아닌 발산의 동력이 된 것과 대조적이다.<sup>25)</sup> 그러나 해외 직접투자의 도착지별 분

25) *Ibid.*, pp. 7-8.





자료: Eckes and Zeiler, *Globalization and the American Century*, p. 265, Table A.6에서 작성.

<그림 3>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구성, 1914~2000(%)

포는 점차 저개발국에 불리해지고 있다. <그림 2>와 <그림 3>을 보면 미국의 해외투자가 지난 40년간 감소추세이고, 국제자본이동에서 저개발국의 비중이 지난 60년간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화에 불참한 나라들의 소득수준이 정체하고 이것이 국가간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본이동 패턴 자체가 세계화의 비대칭적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시장통합의 비대칭적 결과는 단기자본의 높은 이동성에 기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에도 나타난다. 단기자본의 고속이동은 금융시장 성숙도가 낮은 나라에 은행위기 및 외환위기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 자본이동은 소규모 경제에 항상 불리하였는데 이것은 자본이동이 소규모 경제의 거시정책 수행범위를 불비례적으로 더 제한하기 때문이다.<sup>26)</sup> 요컨대 금융제도가 미성숙한 소규모 경제일수록 소위 트라이레마(trilemma), 즉 자유로운 자본이동, 안정적 환율,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수행 세 가지를 동시에 구할 수 없다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게 되는데, 자본시장의 통합에 직면했을 경우 과감히 자유로운 변동환율을 택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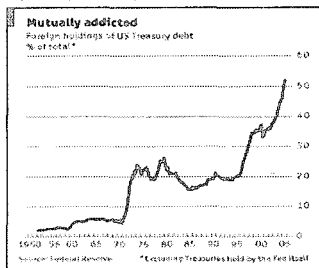
26) Stiglitz는 IMF 요구조건과 단기자본이동의 결합은 금융후진국에 자동적으로 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Stiglitz,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모든 것은 금융제도가 미발달한 나라의 경우 단기자본이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7)</sup>

현행 국제수지조정 메카니즘에는 비대칭성이 한결 심하다. IMF 권고사항에 따르면 적자국은 긴축정책을 통해 통화가치를 유지해야 하며 그 결과 초래되는 경기침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달러 가치 방어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흑자국들이 수출경쟁력 하락과 보유 달러표시 자산 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달러가치를 보전하려고, 수익률도 보잘것 없는 미국의 재정증권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국은 국제수지와 국가재정 쌍둥이 적자<sup>28)</sup>의

27) 양동휴, 「금융 세계화와 국제자본이동: 역사적, 실증적 개관」, 『경제논집』 44-3,4 (2005). Bhagwati는 'Wall Street-Treasury complex'가 외국의 자본시장 개방을 강요하여 단기 자본이 급속도로 이동함으로써 1997년 아시아 5개국의 외환위기를 야기하였다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IMF의 긴축정책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자본통제를 실시하여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Bhagwati, *In Defense of Globalization*, ch.13. 또한 E. Prasad, K. Rogoff, S. J. Wei, and M. A. Kose, "Financial Globalization, Growth and Vola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 Harrison(ed.), *Globalization and Poverty* 참조. 그러나 Forbes는 자본통제가 금융비용을 높이고 금융시장 왜곡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집행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1998년 9월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도 정경유착을 고질화하여 주식시장의 효율을 떨어뜨린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Kristin J. Forbes, "The Microeconomic Evidence on Capital Controls: No Free Lunch," in Sebastian Edwards(e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rthcoming).

28) 미국은 2004년 경상수지 적자 6,659억 달러(GDP의 5.7%), 재정적자 4,120억 달러(GDP의 3.6%)를 기록했다. 일반에 공개된, 즉 연방준비제도 보유분을 뺀 재무성 증권 총액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특히 해외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 아래그림 참조. Economist.com: "You need us and we need you," 미국 재무성 채무 총액 중 해외보유 비중(%)



부담을 해외로 떠넘기고 소득 이상의 소비수준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 절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부활한 브레튼 우즈 체제’의 내용인데 학자에 따라서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즉 준비금 및 거래화폐로서 달러의 역할은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위치를 확고히 하는 기초가 되었는데, 미국의 동맹국과 경제적 파트너들이 경제적 뿐 아니라 정치적 이유에 의해 달러를 보유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2차대전 이후 달러를 방어하는 데 파트너의 도움이 중요했으며, 초기에는 그 파트너가 영국이었고 1967년 이후 서독, 1979년 이후에는 일본으로 바뀐 뒤, 1990년대에 이르러 미국과 독일, 일본의 중앙은행이 서로 협력하는 체제가 성립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협력은 국제통화체제가 무너질 경우에 일어날 국제정치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한다.<sup>29)</sup>

#### IV. 지역주의로의 선회

1980년대 후반부터 가속된 경제적 지역주의, 지역통합의 움직임은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입각한 개방되고 통합된 세계화 경제의 원만한 운행을 위협하고 있다. 지역화된 세계경제는 많은 저개발국을 배제할 것이며 그들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거나 최소한 지연시킬 것이다. 지역주의는 또한 비회원국으로부터 회원국으로 무역전환(trade diversion) 및 투자전환을 초래하여 경제적 효용 달성을 방해한다. 지역통합의 결과 회원국 간에 경제력 차이에 의거한 강대국의 약소국 지배 및 착취의 가능성도 농후하다.

29) Robert Gilpin, "The Rise of American Hegemony," in O'Brien and Clesse(eds.), *Two Hegemonies*, pp. 177-179. Eichengreen에 의하면 외환보유에 쓰이는 국제화폐는 역사적으로 보아 한 나라가 독점한 것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전망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달러와 유로화가 이러한 역할을 공유할 것이 기대된다고 한다. 참고로 1913년 공식 외화자산 보유국의 비중은 파운드스털링 48%, 프랑 31%, 마르크 15%였고, 2002년에는 달러 64.8%, 유로 14.6%, 파운드 4.4%, 엔 4.5%였다. Barry Eichengreen, "Sterling's Past, Dollar's Future: Historical Perspectives on Reserve Competition," NBER Working Paper No. 11336 (May 2005).

해계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이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열렬한 지지자에서 1980년대 중엽 이후 지역주의의 선봉으로 변신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은 1989년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에 멕시코를 영입, 1994년 북미주 자유무역지역(NAFTA)을 설립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전미주 자유무역지역(FTA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EU도 지속적으로 회원국을 확대하면서 단일통화(euro)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중에 다른 지역에서도 방어적 블록을 형성하는 형태로 FTA가 만발하였으며 현재 발효중인 것만도 180개가 넘는다.

미국의 태도가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선회한 것은 당시 GATT 협상이 예전보다 지지부진했던 데 기인한다. GATT의 한계점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즉 회원국이 많아져서 협상이 더 힘들고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가 심각해졌다; 보호의 형태가 관세나 수량할당에서 자발적 수출제한(VER), 덤핑방지(AD), 기타 행정조치로 다양해짐에 따라 협상공간이 복잡해졌다; 미국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체제를 선도하기 힘들게 되었다; 주요국 간의 제도적인 차이로 협상이 더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비공식적 이해와 카르텔'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자유시장'에 입각한 미국과는 관세인하약속이 갖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30)</sup>

이와 같이 세계경제가 지역주의에 의한 지역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계적 후생수준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정태적으로 볼 때 지역통합은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가 있는 만큼 후생 증가를 가져오지만, 역외에서 더 작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을 고비용의 회원국에서 수입하게 되면, 즉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가 있는 경우 비효율과 후생감소를 초래한다. 여러 지역통합 블록이 동시에 설립될 때 상호작용과 전략적 행위, 그리고 동태적 시간 과정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 된 세계경제에서는 협상당사자의 수가 줄어들어 협상이 쉬워지

30) Paul Krugman, "Regionalism versus multilateralism: analytical notes," in Jaime De Melo and Arvind Panagariya(eds.),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London: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1993), pp. 73-75.

고 무임승차 문제도 잘 해결하게 되어 완전한 세계적 자유무역의 달성이 빨라지고 확실해 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블록은 시장지배력을 수반하므로 내부지향적이고 높은 관세를 유지할 경향이 있으며 역외국가에 블록을 개방할 필요 또한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지역주의를 MFN과 연결시키고 개방적으로 만들도록 게임의 법칙을 수정해 나아가는 데 있다.<sup>31)</sup>

지역통합 움직임을 통제하고 관리할 체제(regime)를 고안하는 것이 지역화 된 국제경제의 개방성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체제의 규칙을 집행하는 “가버넌스(governance)”, 즉 “집단의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지도하고 제한하는 과정과 제도”<sup>32)</sup>가 중요하다. 세계 경제가 완전히 세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버넌스는 계속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세계 정부는 실현가능성이 없고 자유방임은 세계화의 후퇴로 귀결될 것이다. 각국의 정부, 국제기구 등 공적 기관과 다국적 기업, 초국적 NGO 등이 각종 법률, 규범, 시장, 계획을 동원하여 가버넌스를 담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WTO를 개혁하여 궁극적 세계자유무역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규칙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 발효 중인 GATT 24조, 즉 MFN 원칙의 예외규정으로서 관세동맹과 FTA를 허용한 조항은, 지역적 무역협정의 차별행동으로부터 비참여국 일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거의 못하고 있다. 지금 지역협정이 180개가 넘는 상황에서 GATT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켰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5개 정도밖에 안된다. GATT 제24조에서 FTA 관련 조항중 허가조건으로 협정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substantially all) 품목의 교역에서 자유무역을 보장하되 ‘과도 기간’을 들 수 있게 하여 그 범위와 속도를 매우 모호하게 규정했다는 것

31) 양동휴, 「지역주의는 세계화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이론적, 역사적 고찰」, 『경제는 길』 43-1,2 (2004), pp. 131-164.

32) Joseph S. Nye, Jr. and John D. Donahue (eds.), *Governance in a Globalizing World: Visions of Governance for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2000), p. 12.

이다. 또한 역외 관세 및 기타 장벽의 수준을 협정 이전보다 높일 수 없다는 조건은 그 수준이 상대국마다 다를 것이어서 '평균적'으로 적용하기도 곤란하고 위반여부를 따지기도 힘들어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4조에 공동 역외관세를 도입하는 관세동맹만을 허용하고 FTA는 제외하자는 주장이 있다. 또한 행정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제 6조(AD)와 제 19조(VER)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조는 폐기하고 6조의 안티덤핑부과금의 발동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sup>33)</sup>

이외에 추가적 권고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기되고 있다. 1) 동반적 자유화: 역내 관세인하와 비례하여 역외관세 인하. 한 가지 방법은 지역통합 참가국 중 통합 이전의 가장 낮은 관세율을 통합 후 공동관세로 정하는 것이다; 2) 단일 소속: 각국에 하나의 우선적 무역 협정에만 참여하도록 하고 중복협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복잡하고 상호 이윤배반적이고 정치적 요소가 개입된 지역주의 네트워크의 등장을 예방한다; 3) 개방성: 새로운 참여자가 기존의 규칙 이외의 부가적 조건을 받아들일게 중요하지 못한다; 4) 규칙 개정에서 차별 금지: MFN 원리의 원용; 5) 상호 책임: 협정 초기 GATT 24조 허가 이후 지속적으로 상호 감시.<sup>34)</sup>

그러나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하나 이상의 FTA의 회원이므로 GATT 24조를 개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이 주로 사용하는 VER, AD 등의 규정도 고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타 권고사항들도 마찬가지이다. 다자간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 세계경제를 이루기 위해 선진국들 간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헤게모니를 가진 미국의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sup>35)</sup>

33) Jagdish Bhagwati,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an overview," in Jaime De Melo and Arvind Panagariya(eds.),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pp. 25-27; pp. 35-37.

34) Vincent Cable and David Henderson (eds.), *Trade Blocs? The Future of Regional Integration*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4), pp. 14-15.

35) 양동휴,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pp. 21-22.

## V. 전망과 과제

반세계화 세력이 세계경제를 20세기 전반부에서 경험했던 세계화 후퇴로 몰아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시장통합의 추세는 지역주의 때문에 약간 왜곡된 형태를 띤 채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세계화를 안정적으로 선도하고 조율할 가버넌스의 성공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sup>36)</sup>를 추구하는 미국의 헤게모니도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FN 원리를 포기하고 지역주의로 선회한 미국이 세계화의 가버넌스에 노력을 경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선 군사적 경제적 주도력의 약화가 이미 노정되었다. 유럽 및 일본, 중국의 추격, OPEC의 교란, 냉전의 종식 등의 배경 하에, 경수산지 적자와 재정적자 누적의 그늘이 요즈음 미국의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sup>37)</sup> 결국 미국의 경제력이 지속적인 기술진보(IT, BT 등)에 의해 얼마나 뒷받침될 것인지가 문제이다.<sup>38)</sup>

36) 미국 정부와 IMF, 세계은행의 지지를 받고 있는(주 27)의 ‘Wall Street-Treasury complex’ 비슷) 10개 항의 지침으로, 균형재정, 교육 및 보건관련 지출 우선, 세계개혁(세원확보와 세율인하), 안정적이고 낮은 이자율, 경쟁적 환율, 수입개방, FDI 개방,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재산권 보호 등을 가리킨다.

37) Vidal은 미국을 선거비용으로 29개 대기업과 언론을 연결시키는 ‘안보국가’라고 비난하면서 예산의 90%가 국방관련지출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Gore Vidal, *The Decline and Fall of the American Empire* (Tucson, AZ: Odonian Press, 1986-92). 그럼에도 불구하고 Todd에 따르면 군사력이 강대국과 상대하는 데는 역부족이어서 약소국과의 전쟁만 일삼으며 보편성을 상실하였다고 한다. Emmanuel Todd, *Après L'Empire* (Éditions Gallimard, 2002), 주경철 옮김, 『제국의 몰락: 미국체제의 해체와 세계의 재편』 (까치, 2003). 여러 저술가들의 견해를 종합한 Ferguson은 재정적자와 경수산지 적자의 부담이 너무 커서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가 장기적으로 불가능함을 강조한다. Niall Ferguson, *Colossus: The Price of America's Empire*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04).

38) Gordon은 1990년대 후반부터 반짝했던 정보통신산업(IT), 생명과학, 신소재산업에 기반을 둔 ‘신경제’(산출 및 생산성 증가의 가속)가 과연 새로운 황금기의 도래를 예고하는 지에 대해 강한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Robert J. Gordon, “Does the New Economy Measure Up to the Great Inventions of the Pas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4 (Fall 2000), pp. 49-74. IT의 공헌이 ‘구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산되지 못하였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위대한 발명’들에 비하면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IT혁신에 대한 유보적 견해는 이외에도 많다. 즉 한계효용이 체감한다, 시간의 공급이 한정

장기적으로 미국의 주도력이 약화된다면 다른 강력한 국가들과의 협조에 다원주의로 나아갈 대안이 기대된다.<sup>39)</sup> 세계화의 안정을 해치는 '후퇴'(backlash)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나, 자유시장 민주주의의 무조건적 수출이 내포하고 있는 인종적 반감과 세계적 불안의 위험 등도 지적되고 있다.<sup>40)</sup> 또한 주요 강대국들이 세계적 일반이익의 입장에서 더 안정적이고 인간적인 국제정치경제적 질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할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다.<sup>41)</sup>

이하에서 뉴욕대학교의 유럽학과 석좌교수이자 레마르크 연구소장인 토니 쥬트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 미국 헤게모니가 실제로 모두에게 이득이 되었음을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타 세계의 혜택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그 래도 이를 거부했을 것이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가장 이로운 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것은 '소프트 파워'<sup>42)</sup>의 지지자들에게도 항상 잘 이해되지 않는 생각이다. ...

---

되어 있으므로 컴퓨터의 힘이 수확체감에 부착할 것이다, 컴퓨터에 대한 수요는 단위 탄력적이며 우향이동하지 않는다, 기존활동을 대체하거나 기존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수취함으로써 수익을 얻으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이상으로 과잉투자 또는 중복투자를 행할 우려가 있다 등등이다.

- 39) Emmott는 다원주의의 이점과 가능성을 논의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진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Bill Emmott, *20:21 Vision*, 형선호 옮김, 『20:21 비전: 도전받는 평화, 의심받는 자본주의』 (터난출판, 2003).
- 40) Bhagwati, *In Defense of Globalization*, ch.16; Amy Chua, *World on Fire: How Exporting Free Market Democracy Breeds Ethnic Hatred and Global Instability* (New York: Doubleday, 2002).
- 41) Gilpin, *Global Political Economy*, ch.15; Maurice J. Williams, *Challenges of Globalization for America: Explorations of America's Role as a Hegemonic Power* (Xlibris Corporation, 2002), ch.13. 국가간 협력이 바람직한 한 독립주권을 확실히 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연계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해야 한다. EU의 예에서와 같은 지역적 집단 가버넌스 네트워크를 모델로 고려해 볼직 하다. Anne-Marie Slaughter, *A New World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42) 군사력이나 경제제재 등의 위협으로 타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젠다를 설정하고 다른 나라의 호감을 사는 매력을 의미한다. Joseph S. Nye,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ublic Affairs, 2004), 홍수원 옮김, 『소프트 파워』 (세종연구원, 2004), p. 30.



… 세계가 제국적 권력을 유지하기에 엄청나게 힘들도록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제국적 민주주의란 어렵다. 투표자들은 제국 유지비용을 전부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 …

둘째, 실시간으로 매스 미디어 전송이 가능한 세계에서는 제국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국적 통제는 폭력적이다. … 그러나 과거 제국의 중심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폭력을 보지 못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 범죄를 목격하는 것은 사후에 범죄에 관해 읽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

셋째, 미국은 미국 이전의 모든 제국의 자취를 따라서 등장했으며 그들의 잘못에 대한 죄가까지 치루어야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효과적인 제국이 될 수 없다. 미국 이전에 프랑스가 베트남에 있었고 러시아가(그 이전에는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다녀갔다. 모든 나라가 중동에 관여했었다.<sup>43)</sup>

---

43) Tony Judt, "Dreams of Empire," *New York Review of Books* 51-17 (November 4, 2004), pp. 38-39.

【Abstract】

## The American Century: Economic Aspects of the U.S.-led Globalization

Donghyu Y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traces the past century of American-led globalization with emphasis on its economic aspects. The United States' hegemony (1945~) and the accompanying 'golden age of capitalism' (1950~73) have historical roots in great innovations of the period 1870s to 1910s. The improvements in technology and productivity were enhanced in their effects by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cluding the IMF/GATT system, and by favorable policy measures of the industrial countries. The American-led globalization resulted in somewhat disadvantageous incidence o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asymmetric consequences of capital market integration. Also noteworthy is America's conversion to regionalism at the expense of multilateralism in the mid-1980s. Along with the relative loosening of American hegemonic power, these factors make the 'governance' of globalization even more complex.

핵심어 (Key Words)

미국의 세기 (American century), 세계화 (globalization), 헤게모니 (hegemony), 비대칭성 (asymmetry), 지역주의 (regionalism), 가버넌스 (governance)